

중국은 왜 한국을 능멸하는가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중국 외교부엔 대변인이 셋이다. 선임자는 국장인 화춘잉(華春瑩·53)이고 밑에 부국장이 둘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 “말잡건을 용납하지 않겠다”(不容置喙·불용치궤)고 한 왕원빈(汪元斌·52)이다. 부국장이면 한국에서 3급 또는 2급 공무원이다. 외교 관례상 외국 정상을 꾸짖을 군번은 아니다.

불용치궤는 청나라 작가 포송령(蒲松齡·1640~1715)이 쓴 기담집 ‘요재지이’(聊齋志異) 중 ‘삼생’(三生)이란 단편에서 유래한 성어(成語)다. “말잡건을 용납하지 않고 즉시 참수했다”(不容置喙, 立斬之)는 문장에서 따왔다. 喙(喙)는 짐승의 주둥이다. ‘말잡건 말라’는 단 순 경교가 아니라, ‘목이 잘리기 싫으면 주둥이 타치라’는 협박에 가깝다. 우회적이고 유희적인 수사로 점잖음을 빼는 외교에서 쓸 수 없는 거친 표현이다.

두 달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했을 때도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51) 대변인은 불용치궤를 언급했다. 인민해방군 강경과가 쓸 법한 비(非)외교적 언사가 외교부 브리핑에서 올해에만 두 번 나왔다. 모두 한국을 향해서였다. 서

리, 중국을 말에 빗대 “파리가 말 궁둥이에 딱 붙으면 만리를 간다”고 했다. 지난 정부 주중 대사는 시진핑에게 신임을 제정하며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 적었다. 조선 사대주의자들이 명 황제를 향한 충절을 맹세하며 쓰던 말이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하는 대통령까지 나왔다.

중국을 겁내는 공중증(恐中症)은 한국 외교의 고질병이다. 이것이 지난 정부를 거쳐 악성이 됐다. ‘사드 3불’에 반대한 관료는 좌절되고 중국 심기를 중시하는 무리가 출세했다. 친중 엘리트 집단은 지금도 견제하다. 몇 달 전 유엔에서 자유민주 진영 50국이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할 때 한국 혼자 발을 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니다.

왕원빈의 막말이 나온 날 한국 외교부는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모처럼 항의했다. 당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국가안보실에서 완전히 갈아엎은 입장”이라고 했다. 원래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유의 완곡한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날 외교부는 상하이명 대사 초치 사실을 한참 뒤 공개했다. 일본 외교관 초치 때마다 언론에 미리 알려 플래시 세례를 받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접이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현대판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용치궤보다 더한 수모를 당할대로 이상할 게 없다.

왕원빈의 막말이 나온 날 한국 외교부는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모처럼 항의했다. 당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국가안보실에서 완전히 갈아엎은 입장”이라고 했다. 원래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유의 완곡한 내용을 준비했다

중국의 안하무인은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중화주의에 기인한다. 한국을 동등한 주권국으로 보지 않으니 외교가 아니라 훈계를 하고 내정에 간섭한다.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파보고 관제 협상 시위가 붕괴를 이룰 때 이걸 두둔·조장하던 중국 관영 매체들의 논리가 ‘소국이 대국의 이익을 침해한다’였다.

한국 지도층은 중국의 하대와 갑질에 순응해 왔다. 소국을 자처하며 중국에 아첨했다. 전 서울시장은 한국을 파

김준의 맛과 섬 [136]

고흥 우도 섬밥상

식당도 없는 섬에서 밥을 얻어먹는 일은 쉽지 않다. 심중팔구 섬은 작고 주민들은 고령이라 자신들의 밥상을 차리는 것도 버거운 일이다. 큰 섬이라도 여행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중국집을 찾아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하물며 제철에 섬에서 나는 밥상은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다. 바다와 가까우니 싱싱한 회라도 한 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도시 가까운 어시장을 찾는 편이 더 낫다.

다만 예외가 있다. 섬밥상이다. 그런데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흥군 우도에서 섬밥상을 받았다. “여기니은 것 중에 우도산 아닌 것은 싹박에 없애라.”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는 딸이 밥

상을 차리면서 한 말이다. 밥상을 살펴보자. 지금 맛이 들기 시작한 송어, 주꾸미, 낙지, 굴, 부추, 파 그리고 바지락이다. 송어는 회로 살짝 데친 주꾸미에 파를 얹어 감아서 올렸다. 주꾸미와 달리 낙지는 데쳐서 무쳤다. 철이 있는 지라 굴은 삶아 전으로, 부추도 전으로 내놓았다. 화룡점정은 바지락국이다. 아낌없이 바지락을 쏟아부어 국물 맛이 진하다.

우도는 갯벌로 둘러싸여 있는 섬으로 득량만 가장 인쪽에 있다. 물이 빠지면 노두(지표면에 노출된 시멘트 포장길)를 따라 걸어 들어갈 수 있다. 마을 앞에 선착장이 있지만 어장에 나갈 때 이용하지 않는다. 주민들도 물이 빠졌을 때 차를 가지고 오간다. 물이 들어와도 수



심이 매우 얇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교를 놓기 위한 공사가 준비 중이다. 오가는 데 갯벌이 갈라붙지만, 갯벌 덕분에 사는 것이 우도 섬살이다. 겨울에는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고, 봄에는 낙지를 잡고 바지락을 캔다. 그물과 통발을 놓아 송어도 잡고, 낙지와 주꾸미도 잡는다. 섬을 찾는 모든 여행객에게 섬밥상을 차려줄 수는 없다. 여러 번 방문해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누어야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밥상머리에서 맺은 인연으로 낙지가 많이 잡혔다고, 바지락을 많이 캔다고 연락이 온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社 說

대통령 말실수만 기다리는 野, 불필요한 구설 만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도 민주당은 나라 외교는 제쳐두고 대통령 말실수만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의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황당한 일이 넷플릭스 한국 투자와 관련한 해프닝이다.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를 만난 자리에서 넷플릭스가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3000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해외 OTT 기업 투자라니, 생각 없이 퍼주지 할까 봐 불안불안하다”고 했다.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헛것을 본 것이다. 그는 이 글이 사실과는 정반대인 것이 드러나자 사색한 후 다시 “윤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은 것 아니냐”고 했다. 잘못된 주장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삼선전차·하이닉스에 유사시 대종(對中) 반도체 수출 금지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집안에서 큰 소리치고 밖에서 맥 못 쓰면(윤 대통령은) 가장 아니고 폭력 남편”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이 국내에서 도를 넘는 비난을 받으면 외교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최대 동맹국인 미

국에 국빈으로 방문한 때만큼은 야당도 자제해야 한다. 선진국 야당들은 모두 이렇게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은 민주당으로부터 외교 문제에서 어떠한 협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외교 언어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교 언어가 때로는 모호하거나 원론적인 것은 상대국과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을 만족시켜야 하는 중간 지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한 정상들은 절제된 언어를 이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왔다.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 ‘국민과 상대 국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 한국에는 윤 대통령 생각과 같은 사람도 많겠지만 아닌 사람도 그만큼 많다. 특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할 표현은 아니다. 민주당이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했다”고 비판한 것은 일리가 있다. 윤 대통령은 너무 많은 말을 한다. 그만큼 사고 소지도 크다.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은 줄이고 실질을 할 때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걸러서 정제되게 했으면 한다.



임대차법 강행해 전세 사기 불려놓고 “국민 세금으로 피해 구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범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해 밀정하던 전세 시장을 망친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며 “두 당은 당사를 팔고 의원들 세비를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금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 보상을 해야 한다는데, 자신을 엉터리 입법 책임부터 먼저 지라는 것이다. 그런 책임을 질 리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말은 맞는 말이다.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두 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각종 부동산 세금을 줄줄이 올렸다.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자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늘리고 전세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전세가는 2년간 35% 넘게 폭등했다. 2030 청년과 서민들이 수도권 외곽이나 빌라 등으로 밀려나는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전세를 끼고 빌라 등을 매입하는 겹 투자자 유행하고 전세 대출이 200조원대로 2배 늘었다.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바지 사장에게 넘겨 보증금을 때먹는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모

든 게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계속 반대했다. 그래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법안 심의도 않은 채 졸속 강행했다. 임대차법을 발의한 양당 의원만 60명이 넘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되자 주먹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 시행 직전 자기 집 전셋값은 대폭 올렸다.

그러던 민주당이 뒤늦게 정부 대책이 부실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보증금 피해 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 대란은 금리 때문이었다”고 했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양산해 놓고 책임은 탄 대로 돌린다.

민주당은 2016년 여의도 당사를 매입해 가격이 2배 가까운 317억 원대로 올랐다. 국민 세금인 선거 보조금과 보정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 덕분이다. 의원들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그걸 내놓는 건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정당, 입법 책임을 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그게 극단적 선택까지 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출범 때 검사 13명 중 8명 사표,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됐던 검사 두 명이 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로써 2년 전 출범 때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떠나게 됐다. 정상적인 조직에선 있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다. 기관으로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명분은 “검찰 전체”였지만 실제로는 ‘정권 친위 부대’ 처럼 수사했다. 지난 대선 때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은 무리하게 수사하고, 문 정권 불법을 문건 진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셨다. 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학자 등은 ‘전화 뒷조사’를 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그 반대로 움직였다. 2년간의 수사 실적도 거의 없다.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정치권

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認知) 사건은 물론 체포·구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인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해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수사한 결과가 이렇다. 아무리 신생 조직이라고 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공수처 지문위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공수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월급만 촉내는 기관이 된다”고 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딱 이렇다.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탈바꿈하지 못하면 아예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②

"한·미정상, '문재인식 반동' 용납불가 선언하라"

대륙에 맞서 해양 근대문명 개화국가 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세계관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newdaily.co.kr

우남 이승만의 코페르쿠스적 전환... 한반도 최초 근대 문명국가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24일부터 시작되었다. 한국-한국인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한미 동맹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청소년기에 몇 차례의 충격적인 실존적 '코페르쿠스 전환'을 체험했다. 과거에서 낙방한 그는 조선왕조의 썩은 후진성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배재학당에서 그는 선교사들로부터 영어와 서양을 배웠다. 그는 조상 위패에 고하고 서양 의사 손으로 상투를 잘랐다. 그는 급진 정치 활동으로 투옥돼, 성령을 체험하고 개신교도가 되었다. 주자 성리학과 모화(慕華) 사상을 버렸다. 그는 구대륙 아시아를 떠나 신대륙 청교도의 나라 미국으로 향했다. 전근대를 떠나 자유민주공화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긴 여정 끝에 대한민국을 세웠다.

한미동맹-국제연대로 근대 문명국가 지켜냈다

대한민국 건국은, △ 조선왕조의 위정척사(衛正斥邪) △ 민중 토착 종교의 서양 혐오 △ 마르크스주의 민족 해방론 △ 남노당 민족-사회주의 위세에 정면으로 대항한 1세대 [근대 문명개화론]의 구현이었다.

이 근대 문명 지향이 6.25 남침으로 총 붕괴하기 직전, 이승만 대통령은 그 위기를 [한미동맹]과 [국제연대]로 극복했다. 그 후, 대한민국 발전 전략의 주춧돌은 해양 문명권의 일원으로서 대륙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개방된 시장을 집단안보의 힘으로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 안전판을 딛고서 한국은, △ 압축 산업화 △ 세계 10위권 선진화 △ 반도체 2차 전자·바이오·전기차·방산(防産) 분야 선도국가가 되었다.

문재인, 미국 배척하고 대륙 밀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국가적 생존 전략에 반역해, 이른바 '민중 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으로 갔다. 양 이론(攘夷論과 척양(斥洋), 즉 서양 오랑캐를 배척하는 세계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반동을 용납할 수 없다. 한미 정상은 26일 그 '용납할 수 없음'을, △ 가치관 △ 핵 안보 △ 경제 현안에서 분명하게 천명할 것이다. 새로운 공동 변명을 향해서.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4월 24일 게재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4월 24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25
 Advertisement-type Article Series
 광고형 기사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